

환경관리공단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시행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손주석)에서는 차량에 기름 주입 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의 회수를 위해 주유소에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시 성능 발휘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오존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이며, 그 외에도 인체에 호흡기질환, 피부점막, 현기증 등을 유발함은 물론, 발암물질 원인으로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하여 종업원, 운전자, 주변 주민들의 건강보존을 위한 대책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울산, 여천 등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 서울, 경기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유증기 회수설비의 성능발휘 여부와 운영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유증기 회수시설 인증검사와 설치 전·후 검사를 실시하고 매 4년 주기마다 회수배관의 누출여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약3,500개 주유소에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시에는 연간 약 67억원 상당의 휘발유를 회수할 수 있고, 환경피해 감소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향후 15년간 주유소 1개소당 5~7천만원의 순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환경대기질 개선으로 유증기 종업원, 운전자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판매량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러, 주유소에서 회수설비 설치에 따른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VOC 저감 효과를 앞당기고자 유증기 회수설비를 1~3년 초기에 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㉔

수도권대기환경청 운행차 저공해화 장치 실태조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부정부착 예방과 적정 개조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500여 개 공업사를 대상으로 4월부터 6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운행차 저공해화 장치 부착·개조 장비 보유현황, 정비기술인력 보유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부적합 차량 부착 방지를 위해 부착제한 차종 부착 여부 및 주행온도분포조사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집게차·살수차·크레인 등 부적합 차량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공업사에 대하여는 지자체로 하여금 예산회수 및 예산지급보류 등의 행

정조치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행차 저공해화 장치 부착·개조 장비가 부실하거나 부착·개조능력이 부족한 공업사에 대하여는 장비 보유를 유도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운행차 저공해화 장치 적정 부착 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사업장 실태조사에 앞서 지난달 26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제작사·공업사 직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그간 달라진 제도, 장치 부착전 준수 사항, 최근에 강화된 인증조건과 적정부착 요령 등을 설명했다. ㉕